

#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 자 치 행 정 과 】**

#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31
----------	------

제출연월일 : 2017. 02.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고,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인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휴식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공가 조문 정비(안 제20조제5호 및 제9호)
- 나.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안 제21조제9항)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7. 입법예고 : 생략

- 가.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나. 사유 :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8. 부서협의 결과 : 덧붙임**

가. 협의기간 : 2017년 1월 13일 ~ 1월 16일(4일간)

- 협의내용 : 의견없음

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없음

다. 규제관련 협의사항 : 해당없음

##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 **10. 관련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및 시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1조제9항 전단 중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를 “시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신현선
	팀장 직위·성명	총무팀장 이상렬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정주연 (790-541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0조(공가)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u>건강검진 및 시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u></p> <p>6. ~ 8.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0조(공가)-----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u>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u></p> <p>6. ~ 8. (현행과 같음)</p> <p>9. 「혈액관리법」에 따른 <u>헌혈에 참가할 때</u></p>
<p>제21조(특별휴가) ① ~ ⑧ (생략)</p> <p>⑨ <u>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는 1회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u></p> <p>⑩ · ⑪ (생략)</p>	<p>제21조(특별휴가) 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u>시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 -----.</u></p> <p>⑩ · ⑪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의2(공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 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2.8.31., 2016.11.29.>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 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 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 【 산업안전보건법 】

제43조(건강진단)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 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 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 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 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4.>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